생계유지형 맞벌이 가정의 일-가정 균형을 위한 자녀양육 지원 분석
- 대구광역시 달서구를 중심으로 -

김 민 영(대구대 석사과정) · 조 희 금(대구대 교수)

일-가정의 균형은 기혼여성의 취업지속을 위한 필수적 요소이며, 맞벌이 가정의 일-가정 균형을 위해서는 이들 가정의 자녀양육과 교육문제의 해결이 가장 중요하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의 경우 자녀의 보호와 지도의 수단으로 76.5%가 학원 수강을 하는 등 사교육 기관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여성가족부, 2005)으로, 공적기관의 자녀돌봄 지원은 미비한 수준이다.

맞벌이 가정유형 중 생계유지형 맞벌이 가정은 가족의 경제적 필요성에 의하여 기혼여성이 자발적 혹은 비자발적으로 생계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취업을 하는 형태로, 사교육비는 오롯이 개별가정의 몫으로 맞벌이로 인해 발생하는 수입에 비춰 부담이 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생계유지형 맞벌이 가정의 특성을 파악하여 일-가정 균형을 위한 자녀돌봄 지원 서비스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거주하는 생계유지형 맞벌이 가정 중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취업여성 12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 하였다.

그 결과 생계유지형 맞벌이 가정의 일-가정 균형과 관련된 특징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첫째, 가정에서는 취업여성 이외의 다른 가족구성원의 지원이 없다. 남편의 역할은 분배보다 도와준다는 보조적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자녀돌봄에 있어 자녀의 등교는 전적으로 취업여성이 책임지고 있었으며, 회식이나 야근 등 직장 일을 포기하고 자녀를 돌보는 경우도 여성으로 나타났다.

둘째, 직장에서는 일-가정 균형을 위한 법과 제도의 활용이 어렵다. 대부분 파트타임직, 임시직, 일용직 등 비정규직에 근무하거나 5인 이하의 소규모 직장에 근무하고 있어 가족휴가제나 탄력적 근무제와 같은 일-가정 균형을 위한 관련제도의 활용이 어려웠으며, 제도 자체를 시행하고 있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셋째, 지역사회 내에서 자녀돌봄 정보의 부족으로 지원망이 형성되지 않았으며 공적돌봄기관에 대한 정보도 부족하였다. 더욱이 생계유지형 맞벌이 가정의 경우 근무시간이 길어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기회가 적었으며, 지역사회 내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자녀돌봄을 제공하는 품앗이와 같은 서비스의 활용어 어려워 지원망이 형성되어 있지 않았다. 이로 인해 자녀돌봄의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 자녀를 혼자 방치하는 경우가 많았다.

넷째, 생계유지형 맞벌이 가정은 일-가정의 균형을 유지하며 자녀를 돌보기 위한 대안으로 근무시간 및 소득을 줄여가며 경제활동을 유지하고 있었다. 자녀돌봄을 위해 취업여성이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변경하거나 파트타임이 가능한 직장으로 이직하였으며, 이는 생계유지형 맞벌이의 경우 경제의 보탬이 되기 위해 맞벌이를 유지하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 생계유지형 맞벌이 가정의 경우 개별가정 내에서 일-가정의 균형을 이루기 힘들고 직장에서의 근무형태 및 직장제도의 변화가 어렵고 더딜 수 밖에 없으며 지역사회 내 자녀돌봄을 위한 지원망 조차 없기 때문에 자녀돌봄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자녀돌봄 서비스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여 서비스를 개선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

이는 취업여성의 경력 단절을 예방하여 일-가정의 균형을 이루게 하고 나아가 저출산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